

상훈과 질투로 가득찬 언론의 대학관련 보도

강 준 만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학과 대학교수들은 분명 비판받을 점이 많다. 그렇기에 언론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학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의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학과 대학교수에 대해 보도할 때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발전에 역행하기 일쑤다.

언론의 대학교수 관련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보도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은 거의 전무했다. 비록 과장과 왜곡이 난무할망정 언론의 대학교수 비판에 타당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한 이상,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쟁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최대의 '언론 상품'

우리 언론에게 대학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이 질문 이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이 질문보다 더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가 92년 말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당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교육시키겠는가?”라는 질문에 학부모들은 아들일 경우는 96.6%, 딸일 경우는 93.7%가 대학 이상까지 교육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다.¹⁾

두말할 필요없이,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식 교육이다. 집을 팔고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식의 과외비를 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그 어느 나라 언론보다 더 상업적인 우리 언론이 그 점을 무시코 넘길 리는 만무하다. 언론은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품'이 대학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특히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 행태 속에서 '장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는 대학입시 시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언론은 이미 1년 365일 전 기간을 대학입시 시즌으

1) 『교원복지신보』 93년 2월 1일.

로 삼는 편집 정책을 실시한 지 오래다. 그전 그만큼 우리의 대학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는 탓에 수시로 양산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대학교육을 전제로 한 자녀교육이며 언론은 그런 독자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1년 365일 내내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독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언론의 대학입시 관련보도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어느 신문의 논설위원은 “대학입시야말로 이 나라에서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할 때 보도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상보까지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의 대학입시 장사

그러나 언론 스스로 낭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대학 교육열의 과잉’이 교육제도와 사회적 모순의 반영이며 ‘학벌 만능주의’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평소 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 언론이 대학진학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 완수를 전제로 한 독자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는 건 이윤배반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의 대학입시 관련 보도의 절대량이 바로 기존의 잘못된 사회 구조를 전제로 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신문들의 대입정보가 정확한 것도 아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앞서 신문의 대입 정보의 대서특필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어느 신문의 논설위원도 그 칼럼에서 대입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입시계 학원들의 정보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들이 앞다투어 입시학원들의 정보를 대서특필하는 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언론은 사실상 입시학원들의 고유 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일간지들이 ‘가정학습’ ‘대입 학력교실’ ‘주말 학습관’ 등의 이름으로 일요일마다 4개면에 이르는 지면을 학

습지로 만들고 있다. 그렇잖아도 고교 교육이 ‘모의고사’의 과잉으로 파행을 치닫고 있는데 신문들마다 경쟁적으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언론사와 상업적인 입시전문회사들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가 하면 신문들은 수시로 학력경시대회마저 개최하고 그걸 사고로 알리기 바쁘며 또 그 결과를 버젓이 기사 형태로 보도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학력경시대회의 장면을 1면에 칼라 사진으로 게재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두말할 필요없이 신문들이 학습지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학습지가 독자를 확보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매 일선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서 상호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A신문 보급소 총무와 B신문 보급소 총무가 대면하게 됐다. 자유기고가 박상건의 말을 들어보자.

이들은 거실에서 있는 고교생들보다 입시문제지를 무료로 배달하고 있다고 은근히 관심을 유도했다. A신문 총무가 국내 최초로 ‘대입교실’을 개재해 서울내 수석 합격자를 해마다 배출했다고 주장하

2) 이행원, “‘메아리’-대입정보의 실과 허”, 『한국일보』, 93년 11월 12일, 5면.

자 B신문 총두는 93년도 학력고사에서 95.6%의 적중률을 기록한 중앙 교육 연구소가 전담해서 출제했다고 맞섰다.…… 이러한 경쟁은 특정 학교 기관에까지 판촉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러, 최근에 반포고등학교에서는 작문 시험에 C신문 사실을 실었다가 B신문을 구독하는 학부모와 B신문 지국이 학교 쪽에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³⁾

감정 일변도의 보도와 논평

신문들의 독자들에게 대한 입시 관련 과잉 서비스는 보도에까지 영향을 미쳐 독자들의 비위에 영합하는 '기사를 양산해낸다. 학부모들에게 아침도 불사하는 신문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의 모든 신문들이 집중적인 독설을 퍼부었던 제 2차 수능시험에 관한 보도이다. 이 보도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아침'으로 일관하고 있는가에 대해 일부 의식있는 독자들이 가한 비판 2개를 들어보자.

11월 19일자 '기자수첩'을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기사 수첩은 2차수능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3개월간의 비지땀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표현했고, 편집자는 '수험생의 분노'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2차시험이 꼭 1차보다도 쉬워야 하는 법은 없지 않은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일 2차시험이 쉬워 고득점자가 많이 생겼다면 대학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또한 2차시험 불필요설 등은 성급한 판단이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는 몇 년간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공청회 발언을 토대로 당국이 오랜 고심끝에 만든 제도인데 단 한번의 시험으로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⁴⁾

16일 실시했던 2차 대학 수능능력시험이 예상외로 어려워 1차 때보다 평균 점수가 15~20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에게 큰 실망을 준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감정이고 공공성을 띤 언론마저 감정에 치우친 것 같은 보도는 삼가야 할 줄로 믿는다. 그런데 18일자 22면에는 '속았다. 고 3 교실의 수능 성도'. 23면에는 '2차 수능 석 달 헛고생'이라는 제

목에서 '헛고생'이네 '속았다' 등의 단어를 사용. 고 3 교실 빈음을 전달하고 있다. 차라리 석 달 동안 놀고 공부 안 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는 말인가.……⁵⁾

언론의 그런 상식 이하의 감정적 보도는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94년 6월 13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가 9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본고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제도 긴급대책안'을 발표했다할 때에도 언론의 추태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거의 모든 신문들이 교개위의 발표를 '깜짝 쇼'로 몰아 붙이면서 교개위 위원들에 대한 인신 공격성 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신문들은 사실 및 기사 제목에서조차 "교개위의 경솔" (『한국일보』), "교육개혁이 장난인가" (『중앙일보』), "교개위의 경거망동" (『동아일보』), "'장난하나' 분통" (『조선일보』), "'무책임한 폭탄선언' 비판" (『경향신문』)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교개위의 발표 내용을 칭찬하건 비판하건 그건 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이성

3) 박상진, "끝도 없는 신문전쟁", 『생이 깊은 물』, 93년 5월호, 82면.

4) 차정득, 『조선일보』, 93년 11월 24일 독자투고.

5) 이강령, 『중앙일보』, 93년 11월 24일 독자투고.

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학생들이 실험도구인가”라는 따위의 기사 제목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폭언이다. ‘장난’이니 ‘경거망동’이니 하는 표현도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반응일 수는 있어도, 그게 어찌 이 나라의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입에서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서울대 위주의 과장·왜곡 보도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부추기면서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신문들의 상흔은 대학을 자의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데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신문들은 대학입시 보도를 사실상 ‘주요대학’의 입시 보도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학력고사 점수에 근거한 세칭 일류대학이 존재하며 절대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문이 그런 일류대학들에 편중된 보도를 해도 괜찮은 것일까.

신문들의 대학 차별은 수석 합격생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역실히 드러난다. 이와 관련, 건국대 조두환 교수는 “다른 대학의 수석합격자들에 대해서는 이름 하나 내주기에 인색한 각 일간신문들이 서울대 합격자가 발표되자 전체 수석, 계열별 수석에 여학생 수석, 쌍둥이 합격생까지 거의 3개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야단법석이었다. 대통령 당선자마저 특별히 전화를 걸어 축하를 하였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⁶⁾

그러나 신문들이 인터뷰 기사를 실은 서울대 합격생들의 종류는 조 교수가 지적한 것보다 더 많다. 여러 신문들이 계열별 여학생 수석, 최고령합격 및 최연소합격, 그리고 그밖의 이색적인 합격생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는 게 통례다.

그런가 하면 신문들은 학과마저 차별 대우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93년 1월 5일자 사회면의 서울대 합격자 관련기사엔 “주요학과 합격선” 제하의 박스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학과’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것인가. 『한국일보』 93년 1월 10일치(일요일) 대입가정학습지 10면은 “본사 주최 「대입학력경시대회」 입상자 대부분 서울대 인기학과 합격”이라고 선전하고 합

격한 76명의 명단을 출신교와 진학학과 이름까지 밝혀가며 실고 있다. ‘인기학과’라는 표현은 『조선일보』의 ‘주요학과’라는 표현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신문의 ‘서울대 우대주의’는 분명 어느 정도는 정당한 것이다. 서울대는 한국 대학교육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들의 ‘서울대 우대주의’는 이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서울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로 인해 서울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느 기자의 양심적인 비판을 직접 들어보자.⁷⁾

모 일간신문에 ‘서울대 일어과 신설 검토’란 제목의 기사가 나간 2일 오후 서울대 주변에선 ‘또 시작인가’란 한탄섞인 말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현재로서 전혀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바 없다’고 서울대 교무처 담당자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빠르면 95년부터’란 소제목까지 붙인 신문은 이미 수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의 손에 쥐어진 후였다. ‘서울대’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대 교무처장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1면 톱기사도 쓸 수

6) 『동아일보』, 93년 1월 15일 독자투고.

7) 김병직, “미확인 보도경쟁”, 『문화일보』, 93년 12월 4일, 22면.

있었다는 말들이 언론계 내에선 농담 아닌 농담으로 떠돌고 있다. '기사거리가 떨어지면 서울대 출입 기자의 얼굴만 바라본다'는 말도 서울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흔히 오기는 현실이다.

신문들의 그러한 경쟁 때문에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오래 전에 서울대나 다른 대학에서 실시된 것인데도 무조건 '최초'라고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적어도 사회면 머리 기사로 말이다. 『언론노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 '최초가 아닌데 최초의 일인 듯 듣갑게 크게 부풀려지는 때도 많고 대학당국의 최종 결정도 아닌 일개 과의 건이나 결정조차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다뤄져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며 '서울대 기사가 파열경쟁의 결과물로서 파행보도되는 경우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관악서 한 출입기자는 '서울대 기사라면 일단 키우고 보는 데스크의 풍토가 취재 기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 본의 아니게 부풀리는 기사로 처리해야 할 때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이로 인해 경쟁기자들 사이에서 관악서가 기피 출입처가 됐다'고 말했다.⁸⁾

언론의 편협한 학력주의

우리 국민의 대학입시 열기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렉키금성경제연구소는 92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캐리 베키 시카고 대학 교수의 이론을 인용, 최근 입시부정사건을 억대의 찬조금을 지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더 큰 만족과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의 심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대학입학을 통해 얻는 효용가치가 하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⁹⁾

그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당위적 차원에서라도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언론은 학력간 임금 격차를 더욱 줄이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만능주의 내지 간판 제일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개혁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은 그런 개혁의 당위보다는 개혁되어야 할 현실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독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상업성을 추구하

기에 바쁘다.

학력간 임금 격차는 초임 또는 입사후 몇 년간의 임금만 비교하지 말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존재하는 학력주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옳다. 입사후 몇 년간의 임금 비교는 기만적일 수 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생애임금개념'에 근거해 정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년 대졸 남자의 생애임금을 100으로 해서 이를 지수로 나타내면 대졸 여자 91, 고졸 남자 58, 고졸 여자 41이었다. 일본의 경우 89년 현재 생애임금이 고졸 남자가 대졸 남자의 77퍼센트를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의 학력간 임금 격차는 지나친 것이며, 그 당연한 귀결로 대학입시 열기도 지극히 경제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¹⁰⁾

언론은 대학입시 문제는 이제 곧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적어도 2000년부터는 대학이 '넓은 문'이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분석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¹¹⁾ 그러나 언론의 보도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대

8) "서울대 기사면 무조건 키우나", 『언론노보』, 93년 12월 11일, 3면.

9) 『경향신문』, 93년 2월 17일.

10) 『한겨레신문』, 92년 9월 30일.

11) 『동아일보』, 92년 5월 26일.

학입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류 대학에서 낙방한 학생은 지금이나 그때나 재수를 할 것이 틀림없고 또 언론은 1류 대학 중심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그런 경향을 지속시킬 것이다.

사실 언론은 체질적으로 대단히 편협한 학력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중앙 언론사 기자들의 절대 다수가 일류 대학 출신들이다. 우리 언론보다 기자들의 전문주의가 훨씬 앞서 있거니와 전문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나라들에서도 전체 기자 중 고졸 출신 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지만 우리 기자들은 100퍼센트 대졸 출신인 데다 대학원을 졸업한 기자들도 적지 않으니 그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학력주의의 편견을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앞서 지적한 신문의 지나친 '서울대 우대주의'도 중앙 언론사 기자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전반적인 '학력 편견'에 대해서 『언론노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각 언론사가 수습기자 선발을 거의 마친 가운데 올해 조선일

보에 응시했던 지원자 수가 예년처럼 모 경쟁사에 비해 적었던 사실을 놓고 노조가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해 눈길. 노조에 따르면 두 회사의 경쟁률 차이는 91년 1천4백76 대 2천5백23, 92년 1천4백94 대 1천8백33, 93년 8백12 대 1천8백65명이었던 것. 물론 지원자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회사가 지나치게 일류대 출신을 선호, 응시자들이 '조선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니냐고 우려. 조선은 신입사원의 출신대를 3~4개로 제한해 놓고 해외유학자를 증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으로 인해 서울대 출신 신입기자가 압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즉, 88년~91년 신입기자 가운데 75.8퍼센트가 서울대 출신이어서 비슷한 기간 경쟁자의 51.2%와 큰 차이를 보인 것. 특히 경쟁지의 경우 국내 유수 5개대 이외에 '기타대' 출신자가 9.3%나 된 반면 조선은 기자들 출신대학이 5개대에 국한됐다는 것이다.¹²⁾

엘리트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대학과 대학생들이 능력에 있어서 평등할 수는 없으며 평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엘리트주의가 크게 오도되어 있으며, 배타적인 학맥의 형성이 자유경쟁에 근거한 능력사회의 형

성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의 특성화는 물론 대학간 선의의 경쟁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대학 출신자와 고졸 출신자 사이의 기회균등과 그에 따른 선의의 경쟁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언론인의 대학교수에 대한 질투와 혐오

언론의 대학 관련 보도의 문제가 단지 언론의 상흔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다. 언론의 과장 및 왜곡 보도의 상당 부분이 언론인들의 대학교수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질투'는 점잖은 표현이다. 대학교수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하는 언론인들이 적지 않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공정하게 이야기해서, 대학교수들이 언론인들로부터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회생하면서까지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대학교수들은 너무 편하다. 교수 사회에 경

12) 『언론노보』, 93년 12월 11일, 3면.

쟁도 없거니와 방학이랍시고 몇 달을 평평 놀아 제킨다. 언론인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은 지식인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같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때로 언론인과 대학교수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언론인들이 접하는 교수들의 대부분은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신문사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대중적인 지식시장에서 활동하는 교수들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언론이 대학교수로부터 기대하는 건 사실상 지식이 아니다. 물론 칼럼을 잘 쓰는 정도의 실력은 기대하겠지만, 칼럼을 잘 쓴다는 게 무어 그리 대단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란 뜻이다. 언론이 대학교수로부터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건 대학교수라고 하는 간판이다. 그것도 이왕이면 일류대학 간판일수록 좋다. 대학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아직 우리 사회에선 대학교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언론은 대학교수의 그런 '상품성'을 사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대학교수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건 당연하다. 지극히 속물적인

신문 칼럼을 쓰는 일은 일반적으로 교수보다는 언론인들이 낫다. 그런데도 단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교수들은 적어도 신문 지상에서 언론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언론인들은 신문 장사를 위해 대학교수를 이용하면서도 대학교수가 누리는 그런 특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문들은 그들이 대학교수를 '키워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대선시 국민당과 『조선일보』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 『조선일보』가 김동길씨에 대해 '우리가 그를 키워 주었다'고 주장한 때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다. 유명 대학교수라는 건 언론매체에 얼굴을 자주 내밀어서 되는 것이지, 학문적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대학교수 출신으로 정·관계에 진출했던 대학교수들의 대부분이 신문에 열심히 칼럼을 써 정·관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언론매체에 얼굴을 내밀어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매커니즘 자체가 알파하기 짝이 없다. 그건 마치 연예인이 인기를 얻는 매커니즘

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언론인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대중적인 지식시장에서 활약하는 대학교수들의 상당수가 언론과의 공생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데다, 심지어 일부 대학교수들은 신문에 칼럼을 쓰고 싶어 언론에 추파를 던지는 일도 있다 하니, 언론인들이 대학교수를 곱게 보아주기란 어려운 일일 게다.

대학교수를 '상품'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조선일보』가 "우리네 학자 중에는 너무도 현실과 정치에 참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또 명성을 좇아 매스컴을 좇으려 든다. 그러는 가운데 인기만을 좇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일삼는다"고 말한 건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2중적 인식의 일면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겠다.¹³⁾ 실제로 그런 교수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인들이 그런 극소수의 대학교수를 전체 대학교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조선일보』처럼 대학교수를 '상품'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큰 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일수록 대학교수에 대한 반감도 크다는 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

13) 『조선일보』, 93년 8월 19일, 1면 '만물상'.

실 그간 대학교수 사회에 대한 비판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건 바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썩어 있는 집단이 대학교수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조갑제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집단은 기업인, 과대평가된 집단은 교수다”는 자신의 신념을 밝히면서, 대학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수 사회에는 경쟁이 없다. 견제와 경쟁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능력이 그 역량껏 발휘될 수는 없다. 관료 제도에도 경쟁은 없지만 견제는 있다. 견제마저 없는 한국의 교수 사회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사회이다. 역대 정부, 특히 김영삼 정부가 교수들을 요직에 중용한 것은 전문 기능보다도 학식을 중시한 조선조 양반시대로의 후퇴이다.…… 해방 후의 한국 근대화 와 그 민주화 과정의 주역은 정글과 사막, 막장과 공장을 누빈 기업 종사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경영자들이었다.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조선조 시대의 주역들인 선비들이 아직도 힘을 쓰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들을 깔아 뭉개고 있는 시대착오적 상황에 있는 것이다.¹⁴⁾

대학교수 모독에 재미붙인 언론

교수사회에 경쟁이 없다는 비판은 백 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언론이 정말 교수 사회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싶다면, 왜 우리 대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심층 분석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논자가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짓눌려 혹세무민하는 역할을 해왔고 아직도 그 타성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언론의 모든 책임을 언론인들의 자질과 품성에만 돌리면서 언론인들에 대해 지독한 비판을 퍼붓는다면, 언론인들은 그런 비판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논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는가? 도대체 어떤 대학교수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들을 깔아뭉개고 있던 말인가? 오히려 극히 일부나마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들의 품에 안겨 그들을 예찬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쓰니까, 언론인의 대학교수 비판은 설득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왜 우리 언론의 대학교수 관련 보도가 때로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을 일삼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언론의 전반적인 수준이 아직 낙후돼 있다는 점도 한 이유이긴 하겠지만, 보다 큰 이유는 언론인들이 대학교수에 대해 갖고 있는 질투와 혐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학교수들은 분명 비판받을 점이 많다. 그렇기에 언론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학교수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의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대학교수에 대해 보도할 때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발전에 역행하기 일쑤다.

모든 신문들의 94년 7월 9일 치에 일제히 떠들썩하게 보도된 ‘총장직선제 폐지론’도 바로 그런 종류의 기사다.¹⁵⁾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대학총장직선 폐지 촉구”를 내건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신문들이 사회면 머리 기사에 그런 식의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사설과 해설기사까지 가세해 대학교

14) 조갑제, “한 고참기자의 열두가지 인간관”, 『샘이 깊은 물』, 93년 9월, 144~145면.

15) 박재선, “기자수첩 — 총장직선제 폐지론 보도”, 『교수신문』, 94년 7월 16일, 2면.

수들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이면 총장 하나 제대로 못 뽑겠는가 하는 조롱과 아울러 대학총장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덩달아 난무했다.

그러나 그런 보도의 무대가 되었던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선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 정부에 건의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총장 직선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제 발표가 있었을 뿐이었다.

국립대 연구보조비 차등지급을 둘러싼 교수측과 정부측 간의 실랑이에 대한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연구보조비는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보조비로서, 일종의 생계 보조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교수의 경우 월 13만 원에 불과한 액수를 매년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발상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땠던가. “국공립대는 경쟁 외면 성역인가”라느니 “교수 연구비 나눠먹기 고집” 따위와 같은 기사 및 칼럼 제목이 시사하듯이, 교수들을 아주 한심한 인간들로 비판하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¹⁶⁾

기자들이 주로 상대하는 교수들이 부수입이 많은 교수들이라, 교수들의 봉급이 기자들의 봉급보다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국립대 교수의 봉급이 일부 중앙 일간지 기자 봉급의 2분의 1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일까? 어느 신문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언론의 대학교수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야구장 앞에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치대며 살아간다. 이렇게 몸을 부비고 치대는 가운데서야 우리는 동료의식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고 비로소 안도감을 갖는다. 차별성은 거북스러운 것이며 엄정하고 객관적인 주장은 귀찮은 일들만 만들어낼 뿐이다.…… 국·공립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연구 실적에 따른 연구비 차등 지급 원칙을 거부하고 똑같이 일괄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치대기 의식의 한 단면이다.¹⁷⁾

대학교수의 대응이 필요하다

언론이 진정 우리 대학을 염려하고 대학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원한다면 우선 당장 대학관련 보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키우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은 교수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과 더불어 대학교수 집단을 경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잡범들을 다루는 ‘사건 보도’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말단 사회부 기자도 교수는 일단 ‘조지고 보아도’ 무방한 잡범처럼 다루도록 교육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설위원들도 이젠 제발 교수들에 대한 소아병적인 질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수 사회 달라져야 한다”는 제목을 내건 어느 신문 사설은 미국 대학 교수들을 극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우리 대학가에선 요즘 3T 교수(아침엔 차, 낮엔 테니스, 밤엔 TV)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교수가 연

16) 『중앙일보』, 94년 5월 13일 사회면 머리 기사와 기자의 ‘취재일기’.

17) 김영애, “중앙칼럼 — 「집단주의」와 혐오권”, 『중앙일보』, 94년 7월 30일, 5면.

18) 『동아일보』, 93년 11월 23일 사설.

구와 강의에 불성실하면 그 대학은 도태될 것이고 따라서 그 나라도 쇠퇴할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뒤에 한 말이 백 번 지당하다 해도 그 논거로 댄 말이 황당부계하다면, 그런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평소 여론 조사를 남용하는 언론이 어찌하여 ‘3T 교수’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건 조사하지 않는가. 설사 ‘3T 교수’란 말이 우리 대학에 대해 비판적인 대학교수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문이 그걸 밀도 끝도 없이 우려먹으면서 모든 주장의 논거로 삼는다는 건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졸렬한 짓인가.

언론의 대학교수 관련 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모든 대학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보도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은 거의 전무했다. 기껏해야 『교수신문』에서 몇 차례 지적된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교수들의 그런 ‘점잖은’ 태도가 바로 그런 과장·왜곡보도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과장과 왜곡이 난무할망정 언론의 대학교수 비판에 타당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한 이상, 언론보도

에 대해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쟁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30여 개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언론학회나 대학교육 단체들이 그런 일을 적극 맡아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신문들의 대학관련 보도 중 왜곡·과장·방언을 모아 정기적으로 펴내는 일이다. 그런 작업이 1년간 누적되면, 언론은 대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망치는 주범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언론의 대학관련 보도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대학관련 비판은 더욱 왕성해져야 한다. 특히 인맥과 학맥에 의한 교수체용 비리를 비리로 여기고 있지 않은 일부 교수들의 무감각과 도덕적 과탄에 대해선 그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집중적인 비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언론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과 대학교수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

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학계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학맥 위주로 배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학계 내부의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언론인으로 오래 활동하다가 대학에 진출해 교편을 잡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는 언론인을 영입할 수 있는 최적 학과라 할 신문방송학과의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또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명성을 좇아 매스컴을 좇는 교수들이 많다면, 그들 역시 사회 비판은 왕성하게 하면서도 언론과의 공생관계를 위해 언론만큼은 비판의 성역으로 남겨 놓는 2중성은 버려야 할 것이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을 ‘키우는’ 기존 관행 자체에 변화가 일지 않는 한, 언론의 대학교수 조롱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

강준만/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언론학 석사,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정브제국주의』,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권력과 언론』 외 다수가 있다.